

## 21세기는 ‘정치+과학’의 시대

글\_곽재원 중앙일보 경제부 부국장 kjwon@joongang.co.kr

지금의 시대는 시스템의 시대다. 관료의 시대에선 엘리트 관료들이 중요한 정보를 장악하고, 적은 가용자원의 배분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이 때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 개개인의 안목과 능력이 중시됐다. 그러나 시스템의 시대는 복잡한 현안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선긋은 프로젝트 매니저(PM)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 국가정책을 끌고 나갈 유학식·다경험자들이다. 요즘 과학기술계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총리도 다름아닌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 PM이다.

20세기의 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 등으로 학문분야가 세분화되는 분화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IT, BT, 나노 등으로 합쳐지는 융합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 나라의 잠재력을 평가할 때도 20세기는 각 분야의 능력을 합치면 되는 리니어(선형) 모델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1세기는 산술적인 합계보다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시너지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단순 합계만도 못한 결과를 내는 합성의 오류가 목격되는 넌리니어(비선형)모델이 상식이 됐다. 예컨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집화된 정부부처간의 소모적 경쟁과 갈등, 연구개발의 지나친 중복, 느슨한 정책평가 등은 합성의 오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시스템의 시대를 열고 있는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러한 ‘합성의 오류’와 싸움을 벌여 왔고, 전선을 더 넓혀나갈 태세다. 이를 지휘할 장수가 과학기술부총리인 셈이다. 국회가 과

학기술에 정치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치여 과학기술을 직접 살필 여유가 없는 사정이고 보면 과학기술부총리의 출현은 매우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만큼 과학기술부총리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들이 많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우선 국가 CTO(최고기술경영자)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중흥으로 꿰뚫어 보고 서로 조합시킬수 있는 매트릭스(matrix)작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책이 산업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갖추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지금 나라의 외교, 국방, 경제, 환경, 복지, 교육, 에너지 등의 여러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한 국가전략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과학기술분야에서 확실히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사회전체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이런 터전위에서 지금까지의 기술개발모델을 국가혁신모델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 다음은 평가다. 그 잣대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iciency)이다. 흔히 개혁하면 구조조정이나 기구축소 등 능률을 강조하는 효율성에 얽매인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의 수장은 그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효과성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수년전 일본 경제기획청과 과기청장관을 지낸 오미 코지 의원(중의원)은 과학기술정책의 수장이 제시해야할 정책의 큰 방향을 이렇게 정리했다.

- 전략적 관점을 갖고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한다
- 기초연구에 의해 경제 저력을 강화한다
- 산학관 연계에 의해 경제사회를 활성화한다
- 과학기술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험센 벤처를 키운다
- 창조성 풍부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을 개혁한다
- 최첨단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과학기술로 지구규모의 과제에 도전한다

일본은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을 갖추기 위해 이미 지난 1995년 11월 의원입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을 내놨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본 만들기의 방향으로서 세계최고수준의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또 이 기본법을 근거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만들어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의 장기목표를 숫자로 나타냈다. 2001년 1월에는 행정개혁의 핵심의 하나로 내각에 '종합과학기술회의'를 발족했다. 그 전에는 '과학기술회의'란 이름으로 연 1회 형식적으로 개최됐다. 종합과학기술 회의는 월 1회 반드시 총리가 출석하고, 그 앞에서 각 장관들이 대본없이 실질적으로 토론을 벌이도록 돼 있다.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입안과 종합조정을

행하면서, 예산등의 자원배분에 대한 방침을 심의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도부터 과학기술관계 예산편성시 각 부처가 요구하는 시책마다 4단계로 우선순위를 매겨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 앞서 미국은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군사기술을 민간으로 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경제력 구축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 냉전시대의 과학기술정책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신산업창출, 생활수준향상의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을 자리매김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1998년 '경쟁력 백서'를 발표했다. 블레어 총리가 정권의 최중요 정책으로서 '지식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knowledge driven economy)'를 표방하며 지적활력 즉, 과학기술력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강화의 기반이라는 것을 국민들에 인식시켰다. 행정조직이 다른 미국이나 영국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설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과학기술부 총리제를 만든다면 이들 나라보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와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과학기술의 진흥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위치시키는데 앞장서는 일'일 것이다.

정치와 과학이 맞물리는 좋은 계절이 다가왔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중심국가 선언 1년의 결정체로서 과학기술부총리제가 실현되기를 500만 과학기술인들은 염원하고 있다. ㉔

